

이덕일의 '역사의 창'



한국국민당이란 당이 있다. 1980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위성정당이었던 국민당이 아니라 193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망명지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서 창당한 민족 정당 이야기다. 이사장은 임시정부 김구 국무령이었고, 이사는 역시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한 이동녕을 비롯해서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 등 항일 민족진영의 거목들이 포진했던 당이다. 1940년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과 합당해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기 전까지 임시정부의 여당이었다.

한국국민당은 1936년 3월 15일 '한민'이란 시사월간지를 창간했는데 이후 임시정부와 함께 중국 각지를 전전하면서 1940년 10월 15일의 23호까지 발행했다. 당시 정확한 정세 분석과 역사관에 목말랐던 교포들에게 가뭄 끝에 단비 같은 호응을 받았다. '한민' 제4호(1936년 6월 25일)에는 "멀리는 태평양 저편, 가까이 는 양자강 이편에서 열렬히 옹호하는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제5호(1936년 7월 30일)에는 "각처 애국동포들의 열렬한 옹호와 사랑을 받음에 감격"한다고 썼을 정도다. 그런데 장간호 말미에 〈북상(獻贖)〉이란 지면이 눈길을 끈다.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자 묵상하라는 것이다. 첫째 "우리 조상나라는 얼마나 흥룡하였는지 그 역사는 얼마나 빛났던가", 둘째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원수 일본에 대한 분한 마음은 얼마나

역사에 무지한 사회 자화상

이며 원수 값을 마음은 얼마나 급한가", 셋째 "오늘날 노예 생애를 하고 있는 동포의 정상은 얼마나 참혹한가"라는 내용이다.

'한민' 제9호(1936년 11월 30일)에는 〈배달(倍達)의 건국기략(建國記略)〉(배달국의 건국기를 대략 서술한다)이란 글이 실려 있는데 "10월 3일이 우리 한배께서 개천건국(開天建國)하신 우리 배달국민의 큰 기념일임은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면서 4393년 전에 배달국이 건국되었다고 썼다. 단군기원, 즉 단기(檀紀)로는 1936년이 4269년인데 그보다 124년 전에 배달국이 건국되었다는 인식이다. '단군조선'도 부인하기 바쁜 이 나라의 현실에서 단군조선 전에 '배달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1936년에는 '누구나 다 알았다'는 서술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더욱이 이 논설은 배달국의 강역을 '늘힌모'인 '백두산(白頭山)'을 중심으로 동쪽은 강원도 창해, 남쪽은 전라남도, 서쪽은 중국의 감숙성(甘肅省) 랴주(蘭州), 북쪽은 러시아령 연해주까지 "동서 4000 남북 6000여 리"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광복 후 프랑스 같은 정상적인 정치 경로를 걸었다면 '한민'의 이런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역사 상식이 되었을 것이다.

'한민' 제9호는 또 '건국기원절 후(後) 감언(感言)'

(건국기원절 후에 느끼는 말)이란 글에서 나라 잃은 '망국노'가 된 이유를 "남을 높이고 나를 업신여기며 남의 것은 가뭇 없이 좋아하고 내 것은 덮어놓고 내버렸다"는 말로써 "대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상들의 역사를 중국 문헌에서 찾아냈지만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아라사(러시아)나 일본의 문헌에서 찾지 않게 만들어 주기를 결심하자"라고 다짐하고 있다. 지금 한국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를 가짜라면서 연도부터 맞지 않는 '일본의 문헌', 곧 '일본서기'를 가지고 가야를 야마토와의 식민지라고 우기는 작금의 매투 추태에 대한 서글픈 예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가야를 '임나일본부'로 둔갑시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윤석열 정권은 일본까지 끌어들이던 합동 군사훈련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모두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학계와 사회 상층부를 장악한 부끄러운 현실이 만든 자화상들이다. '한민' 제10호(1937년 1월 1일) 신년호는 "우리는 조국 광복을 위하여 30년 동안 약전고투하는 항일군"이라면서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독립문에 자유종을 울릴 때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우리 역사에 독립의 자유종은 울리지 않았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코로나가 바꾼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



양태영
태영21병원 원장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 등을 먼저 지켜야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며, 환자가 직접 자가 혈당을 측정하거나 병원을 자주 찾아가 그 결과를 토대로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합병증 유무에 따라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환자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혈당이 당뇨병이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혈당 측정을 자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당뇨병 환자들은 약솜으로 손가락을 소독하고 피를 빼서 측정기에 대고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하므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이 예민한 학생들의 경우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화장실에서 혈당 측정을 하는 등 심적 부담도 크다.

이를 보완해주는 획기적인 기기가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CGM)이다. 반복적인 손가락 채혈 대신, 팔 상완에 센서를 부착해 세포 간질액의 당을 연속적으로 측정, 스마트폰으로 혈당 수치를 전송해 주는 기기가 상용

화됐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식사·수면 중에도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어 혈당 조절이 매우 용이하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후 바로 5분 간격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온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생활습관도 개선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당뇨약제를 하나 추가해서 먹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당뇨병 치료 기술의 발전은 인슐린 펌프와 인공 췌장이다. 인슐린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주입되는 기기가 인슐린 펌프이고,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블루투스로 연결돼 스스로 혈당 결과를 분석해 그 수치에 따라 인슐린 용량이 결정·자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인공 췌장이다. 당 수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저혈당과 고혈당을 미리 예측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 용량이 계산돼 투여되므로 환자는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혈당 측정 결과는 의사에게도 함께 전달되므로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혈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기기는 수년 전부터 개발됐으나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 기술도 발전된 것이다.

당뇨병은 크게 인슐린 분비 세포(췌도 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양 또는 작용에 문제가 있는 2형으로 구분된다. 생활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는 2형 당뇨병과 달리, 1형 또는 심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필요해 하루에도 수 차례 주사를 맞아야 한다. 또한 임신 중에는 약을 먹을

수 없으므로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 이 경우 매일 혈당 상태를 보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숙련되기까지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매일 병원에 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경우 자동 인슐린 펌프와 연속 혈당 측정기, 두 가지가 결합된 인공 췌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번거로운 혈당 측정과 그 측정 결과에 따라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인공 췌장이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 방법도 발전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과로 등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하고 악화된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지혜롭게 바꾸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당뇨약제를 잘 선택하고 혈당 측정을 자주해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합병증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즉,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는 좋은 생활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엔 당뇨에 의한 심한 합병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술했듯이 자가 혈당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기 개발, 그리고 인슐린을 아프지 않고 쉽게 투여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의 발전 그리고 이 두 기기를 연동시켜 개발된 인공 췌장이 상용화되면서 더 쉽게 인슐린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든, 약을 먹든, 혹은 인슐린을 맞든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목표이다.

기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위기



김차준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역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들 역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럽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밀착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는 중이다. 국제 질서가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 삼각 관계의 모습이 중·러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 전선의 강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상황 역시 예사롭지 않다. 2018년 남·북·미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의견 접근을 이루어졌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은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한, 북·미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한·미·일은 동해상에서 대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 특수전사령부는 이

러바 '참수 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역시 이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등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의 시계는 위태롭던 2017년 여름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 어느새 한반도에서 종전과 평화 체제를 둘러싼 논의들은 그 힘을 잃어가고, 그 대신에 적대적인 기운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국제 정세 아래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한 5개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밀접한 북·중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나섬으로써 변화하는 현 정세에 적극적으로 편승할 공산이 크다. 이에 우리 역시 악화된 정세에 말려들었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국제 질서가 과거 냉전 시기로 단순한 회귀가 아닌 다극 체제 아래에서 강대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는 최대한 중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대미 외교는 우리 외교의 중요한 축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동맹에 의존하는 외교는 한반도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취약한 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

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잘못된 정책 목표는 자국을 파괴적으로 치달게 했다. 물론 외교에서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며 선도적으로 이를 이끌 필요가 있다. 탈냉전 이후부터 유지되어 온 강대국 간 협력에 기반한 위계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안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의 현명하지 못한 대응은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끌려갈수록 우리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남북한이 주도하는 평화적 접근만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북한이 양보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모든 분야에서 앞선 우리가 대법하게 전략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에 평화는 반드시 찾아오리라 본다. 여권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는 북한의 방공 개방이나 이산가족의 북한 방문 허용 등은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수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야당과 국민 다수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다.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나라에 빠졌던 과거의 암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社說

탁상행정예 농민 피해...책임 떠넘기기 할 땐가

광주시 남구 압촌동에 있는 저수지 '맹간제'의 물 부족 사태를 놓고 남구와 광주 시도시공사가 책임 떠넘기기로 눈총을 받고 있다. 물 부족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두 기관의 탁상행정 탓이란 점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맹간제는 농업용 저수지이지만 이 일대가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산단 입주 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공원 성격까지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원래 전 저수지 용도를 농업용에서 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맹간제에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짓는 면적이 아직도 88.5ha(26만 5500평)에 달한다. 이처럼 농업용 저수지이자 도시민을 위한 공원 역할을 하는 복합 기능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산단 조성을 맡은 광주시도시공사가 맹간제 공원과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구로부터 건네받은 80년 전 지적도를 근거로 설계해 저수지 수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남구가 건넨 1942년 작성된 지적도에는 몽리 면적(저수지에서 물을 공급 받는 토지 면적)이 24ha에 불과해 현재 몽리 면적보다 64.5ha나 적다 보니 그만큼 저수지 수량을 줄여 공사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두 기관 모두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잘못된 지적도를 건네고 받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로 피하는 소위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두 기관은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은 물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예산까지 서로 떠넘기다 광주일보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15억 원의 양수장 신설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행이지만 근본 공원 역할을 하는 복합 기능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산단 조성을 맡은 광주시도시공사

'물 부족' 광주, 빗물 활용 순환 체계 강화를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 시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주요 상수원이 매말라 식수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그제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속되는 가뭄에 댐, 저수지, 광역·지방 상수도 등 개별 시설 모두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만큼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극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노후 상수관 교체에서부터 빗물 이용 시설 확대, 영산강 하천수뿐만 아니라 장성·담양댐 용수까지 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강수량은 633mm로, 평년 1388mm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 저수량도 평년의

5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내년 봄까지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도물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장성·담양댐과 영산강을 활용해 상수도 원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댐 중심의 수자원 확보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시를 뒤덮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인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홍수나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개선하려면 훼손된 도시 내 물순환 체계 복원이 절실하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透水) 블록 포장과 우수를 모아 두었다가 방류하는 저류(貯留) 시설, 빗물 저장·이용 시설, 식생 수로, 옥상 녹화 등의 확대가 그 대안이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가 환경부의 선도 지구에 선정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도시 내 다른 지구로 확산시키고 모든 개발 초기부터 물 순환을 적극 고려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엇터리 내용, 표절과 짜깁기, 기여 없는 저의 등재, 대학 입시를 위한 연구 참여 등으로 논문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연구자가 새로운 가설을 증명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미래 과학기술을 제시하는 방법은 논문 작성밖에 없다. 가장 적은 나이에 논문을 쓴 이 가운데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가 있다. 1877년 14세가 안 되는 나이에 독일 역사, 로마 등을 주제로 논문을 쓰는 등 그의 탁월함은 대단했다.

19세기의 대석학 베버는 관료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주장했

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진 관료 조직은 무사안일, 비효율, 경직, 무책임, 소극적인 대처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은 국민과 주민의 대표로, 임명직인 관료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물론 이들이 힘을 합쳐 국가·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선출직은 기본적으로 관료 조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을 이

다. 그 시기는 봉건귀족 중심의 중세를 거쳐 근대에 들어 왕을 보좌하면서 복잡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급 공직자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관료 조직은 분업화, 전문화, 위계 서열, 문서주의, 연공 서열과 능력에 의한 승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귀족이나 그들이 추천한 인물들보다 높은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베버는 관료가 사심 없이 공명正大하고, 사명을 가지고 전문 역량을 갖

는 관료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주장했

무능한 정치와 관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